

민주 조상래 vs 혁신 박용두 1년8개월만의 '리턴매치'

6·3 지방선거 격전지

(5)곡성군수

조상래, 정원·관광도시 청사진 제시
박용두, 기본소득·농촌 혁신론 강조
공유재산 거주 의혹 공방전도 치열

6·3 지방선거 곡성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후보와 조국혁신당 박용두 후보가 2024년 재선거 이후 1년8개월 만에 재격돌한다.

두 후보는 정책 경쟁을 펼치는 동시에 조 후보의 공유재산 거주 문제를 놓고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어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곡성군수 선거는 당초 3자 구도로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지난 11일 조국혁신당 박용두 후보와 무소속 이성로 후보 간 단일화가 성사되면서 민주당 조상래 후보와 박 후보 간 대결 구도로 재편됐다.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조상래 후보는 군정 연속성을 바탕으로 관광·정원·농업 분야 대형 프로젝트를 앞세워 재선에 도전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조 후보는 제6대 곡성군의회와 8·10대 전남도의회를 지냈다. 현재 민주당 전남도당 상무위원과 민주당 중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곡성군수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1일 곡성매일시장에서 배우자와 함께 현장 유세를 벌이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조상래 후보 측 제공>



조국혁신당 박용두 곡성군수 후보가 21일 오전 9시 옥과터미널 앞에서 첫 유세를 시작하고 "변화와 혁신을 원하는 군민 염원에 선거 승리로 보답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용두 후보 측 제공>

앙위원회 중앙위원,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 후보는 최근 관공공사 개입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무혐의로 결론 나면서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다.

주요 공약은 ▲호남권 최초 경정장 및 수상레포츠 관광단지 조성 남부권 광역 관광 연계 호남의 랜드마크 ▲곡성형 3S(Smart·Security·Speed) 스마트 안전돌봄사업 추진 ▲장애인 쉼터 조성 및 다중이용 생활시설 이동경사로 지원사업 ▲관내 학생 자기 주도 학습센터 구축 ▲2027년 정해박해 200주년, 성지순례 거점화 추진 등이다.

이와 함께 마스크 장미묘목 육성으로 장미산업화 기반 구축, 2031년 국제정원 박람회 유치 추진, 섬진강 기차마을 지방정원 등록 곡성의 정원도시 브랜드 구축, 섬진강 권역 K-뷰 글로벌 관광 클러스터 구축 등 관광·정원도시 전략도 제시했다.

조상래 후보는 "군수 취임 당시 약속한 '새로운 곡성, 희망찬 군민'의 청사진을 완성하겠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특별지원 재원을 곡성 발전을 위해 확보하고 멈추지 않는 곡성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박용두 후보는 기본소득과 신재생에너지, 치유농업 등을 중심으로 한 농촌 혁신 모

델을 앞세워 민심 공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한 박 후보는 섬진강수해피해 곡성대책위 공동대표, 18대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곡성군농민회장 등을 역임했다.

혁신당 전남도당 위원장 권한대행,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 후보는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곡성을 기회 농촌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걸고 설욕을 노리고 있다.

주요 공약으로 ▲태양광발전으로 가구당 월 40만까지 기본소득 확대 ▲면 지역마다 필수 업

종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육성 ▲신재생에너지(R·E·I·O) 산업단지 조성 ▲곡성군 인재 학습 설립 ▲공설운동장 건립 ▲섬진강 환경유역청 유치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치유농산업 관광특구를 조성하고 마을반찬배달 먹거리 통합 돌봄 등 복지·농업 연계 정책도 공약했다.

박용두 후보는 "공정하고 투명한 군정과 농촌의 지속가능성, 지역 경제 선순환을 중심에 둔 정책 실행으로 새로운 곡성을 만들겠다"며 "말이 아닌 성과로 증명해 '농촌기본소득 1번지 곡성'의 미래를 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본은진·곡성=김영필 기자

"통합특별시 성공" 도시·공간계획 비전 모색

전남도, 도시계획 연합회·춘계학술대회
광역 생활권·지역전략산업 활성화 논의

전남도는 21일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대한민국 도시계획학회 광주·전남지회와 함께 "2026년 도시계획 연합회 및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공을 위한 도시·공간계획 비전을 논의했다.

<사진>

연합회는 전남·광주 대통령이 지역의 핵심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생활권·산업권·교통권과 공간구조를 종합 검토하고 새로운 광역공간계획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전남도와 시·군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 도시계획 전문가, 학회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도시 및 공간계



획 변화, 광역생활권 설정, 지역전략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이번 연합회는 단순한 학술 교류를 넘어 통합 이후 변화할 도시구조와 생활권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도시계획 전략을 점검하는 자리였

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주제발표에서는 ▲통합특별법상 도시 및 공간계획 관련 변경 내용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역생활권 계획과 공간계획 방향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지역전략산업 활성화 방안 ▲

행정구역 통합 사례를 통한 전남·광주 대응 방안 모색 등이 다뤄졌다.

전남도는 연합회를 통해 전남·광주 통합이 단순한 행정체계 개편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과 시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전문가 의견과 현장 건의사항을 폭넓게 수렴했다.

안영순 대한민국도시계획학회 광주·전남지회장은 "전남·광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 생존전략"이라며 "학술대회가 광역생활권 계획과 향후 발전 전략을 논의하고 전남·광주 통합이 지역 경쟁력 강화의 실질적 마중물이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통합은 단순히 규모를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도민과 시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고 지역 간 격차가 완화되며, 산업과 정주 여건이 함께 개선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전남·광주 대통령 시대를 여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전남 소상공인 '외국인 고용' 확대

전남도는 21일 "최근 법무부가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에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례 신설로 이전까지 소상공인은 외국인 채용 시 내국인 직원이 최소 1명 이상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 내국인 직원 고용 요건 없이도 우수 외국인 인재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지역특화형 비자 활용 대상이 지역 소상공인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국내 대학을 졸업하거나 숙련 기술을 쌓은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일할 때 장기 체류 비자로 전환해주는 정착형 비자다. 전남도는 현재 지역특화 숙련인력(E-7-4R) 829명, 지역특화 우수인력(F-2-R) 386명 규모로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번 특례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전남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 소상공인은 2만3천13개소로 전체 사업체의 96%를 차지한다. /양시원 기자

알고당사다

개인형이동장치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01 무면허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범칙금 10만원

02 승차정원 초과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1명
전기자전거: 2명
범칙금 4만원

03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범칙금 2만원

04 음주운전
운전면허 정지·취소
범칙금 10만원

05 어린이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과태료 10만원

한국도로교통공단 KOREA ROAD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부